<b>长性</b>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도자료	배포일시	2019년 6월 26일(수) 14:00	매	수	3매			
	보도시기	배포시 부터	사	진	없음			
	담 당 자	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경제실 개발협력팀 유애라 전문연구원 ☎ 044-414-1239 ⊠ ailayoo@kiep.go.k						
<b></b> /  <b>-</b>	배포부서	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보협력팀 🕿 044-414-1210						

## ASEAN 내 ODA 중점협력국 지원 시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정책효과 극대화해야

- 우리나라는 ASEAN 내 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 중
- 최빈개도국에는 ODA 위주의 지원이 바람직하나, 중저소득국에는 ODA외 다양한 개발재원 및 경제협력 수단을 적극 활용한 지원 필요
- ODA 사업 발굴 시, 주요 국정과제인 신남방정책과 국가협력전략상 중
  점 협력분야 간 연계 가능성 고려해야

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, 원장 이재영)은 『ASEAN의 ODA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현황과 특징』 자료를 발간하였다. 본 자료는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ASEAN 내 공적개발원조(ODA)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.

2008~17년 동안 ASEAN 내 ODA 중점협력국인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미얀마, 필리핀, 베트남 6개국에 대해 국제사회는 977억 1,898만 달러, 우리나라는 35억 6,074만 달러를 지원했다. 국제사회의 지원규모는 2013년 155억 8,934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. 우리나라의경우 2015년 4억 7,687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다소 감소했으나, 2017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.

소득수준별 지원 현황은 국제사회와 우리나라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. 국제사회는 중저소득국으로의 ODA 규모를 줄이고 있으며, 최빈개도국(이하 최 빈국)에 대한 지원은 늘리는 추세다. 우리나라 역시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 대하고 있지만, 아직까지는 중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규모가 최빈국에 비해 2배 가량 큰 것으로 나타나 중저소득국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.

유형별 지원 현황의 경우 국제사회는 양허성 차관과 증여를 유사한 규모로 지원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, 우리나라는 **양허성** 차관을 통한 지원 규모가 증여를 상회한다.

소득수준 및 유형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사회는 중저소득국에 60% 이상의 ODA를 양허성 차관으로, 최빈국에는 70% 이상을 증여로 지원한다. 한편우리나라는 중저소득국에는 국제사회와 비슷한 규모의 ODA를 양허성 차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, 최빈국에는 양허성 차관과 증여를 50%가량으로 유사하게 활용하고 있다.

아울러 우리나라는 ASEAN 6개국의 교통 및 창고, 물 공급 및 위생, 보건 및 교육 등의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. 상위 10대 지원 분야에 대한 비중은 전체의 80% 이상이다. 특히 미얀마를 제외한 나머지 5개국(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필리핀, 베트남)에 대한 상위 10대 ODA 지원 분야 중 80% 이상이 국가협력전략(CPS: Country Partnership Strategy)상의 중점 협력분야와 일치한다. 이는 CPS에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와 수원국의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중점 협력분야를 설정하고, 70% 이상 지원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.

이상과 같이 본 자료에서는 ODA 지원 현황과 특징 분석을 통해 ODA 지원 시 소득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. 최빈국은 ODA 위주로 지원하고, 중소득국은 민관협력사업(PPP) 및 개발금융 등 ODA 외의 다양한 개발재원과 경제협력 수단을 활용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.

또한 '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' 의결안건인 「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(안)」에 따르면, 핵심 대외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ODA 활용을 권고한다. 이는 우리나라의 국정과제인 신남방정책과 ODA를 유기적으로 연계하

여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. 따라서 ODA 사업 발굴 시, 신남방정책과 CPS상의 중점 협력분야 간 연계 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.

<표> 신남방정책과 ODA 지원 분야 연계

			연계 CPS 중점 협력분야						
추진 방향	주요 정책	연계 ODA 분야	라오 스	미얀 마	베트 남	캄보 디아	인도 네시 아	필리 핀	
사람공동체 (People)	• 신남방 지역 학생, 교육, 공무원 대상 인적자원역량 강화	교육	0		0	0			
	• 공공행정역량 강화 지원,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	공공행정		0	0		0		
	• 신남방 국가의 삶의 질 개선	농촌개발, 지역개발 물 공급 및 보건위생	0	0	0	0	0	0	
상생번영 공동체 (Prosperity)	◆ 무역, 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	공공행정, 무역을 위한 원조(AfT)*			0		$\circ$		
	• 신남방 지역 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인프라 개발에 적극 참여	교통		0	0	0	$\circ$	0	
	• 중소·중견 기업의 시장 진출과 상호 교류활동 지원	산업							
	◆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	과학기술 및 ICT**							
	◆ 신남방 국가별 맞춤형 협력	CPS상 중점 협력분야							
평화 공동체 (Peace)	• 긴급사태 예방역량과 신속 대응 및 복구 역량 강화	재해예방, 환경보호					0	0	

주: \* 무역을 위한 원조(AfT)의 경우에는 교통, 에너지, 정보통신 등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, 농수산업, 산업 등 생산 분야, 무역정책 및 행정관리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각국의 CPS 중점 협력분야와 다양하게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음.

자료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(www.kiep.go.kr)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별첨. 『ASEAN의 ODA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현황과 특징』 기초자료 전문

/끝/

<sup>\*\*</sup> ICT 관련 지원은 범분야(cross-cutting) 이슈로서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 지원할 수 있음. 예를 들어, 전자정부 구축의 경우 공공행정 분야의 지원이나 ICT를 활용한 ODA로 볼 수 있음.

자료: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주요 정책 및 각국의 CPS상 중점 협력분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.